2014년 8월 13일 발행

workerssolidarity.org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후원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발행 책임: 김우용(기아차, 010-3092-9003), 정동석(현대차, 010-8363-5695)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노동자모임

현대차에 대한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부당하다

현대·기아차 모두 쟁의를 가결하고 20일, 22일 파업에 돌입하자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금속노조 파업에 제동을 걸고 정몽구를 지원하려고 팔을 걷어붙였다. 중앙노동위는 11일 현대차 지부의 쟁의조정 신청을 반려했다. **중노위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제한하고 체불임금 포기를 강요한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심사숙고 하라"며 매우 노골적으로 사측을 편들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제약하려는 악의적인 조처다. 중노위는 지난 7월 한국지엠지부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지엠지부가 민주노총의 7월 22일 파업에 동참해 힘을 보탤까 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에도 중노위는 **금속노조 파업의 힘을 제약하고 김을 빼려고** 얄팍한 노림수를 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중적 항의와 분노 속에서 현대차 등 대형 노조의 파업으로 투쟁 전선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통상임금 확대를 피하고 임금체계까지 개악하려는 사용자들의 탐욕을 사수하고자 했을 것이다.

현대차그룹 부회장 윤여철은 최근에도 거듭 "법대로 하겠다"며 현대차에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다. 사측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법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기아차에도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윤여철은 기아차를 비롯해 계열사들에게도 '튀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최근 기아차 사장 이삼웅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을 암시하기는 했지만, 그는 삼성과 LG 사례를 들며 어디까지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임금체계 개악, 기본급 억제 등과 연동해 총액임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1백13조 9천억 원

현대 · 기아차 사측은 "환율 리스크와 내수침체" 운운하며 글로벌 이윤경쟁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자들의 요구를 낮추고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들어 줄 돈이 없는 게 아니다. 현대차 그룹은 1백13조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정몽구는 지난 5년간 우리의 고혈을 짜서 사내유보금을 무려 1백76퍼센트나 늘렸다. 사측은 지불 여력이 충분하다.

통상임금 확대 요구는 마땅히 통상임금에 포함됐어야 할 상여금 등 고정 수당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당한 투쟁이고, 기본급 인상과 장시간 노동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만드는 중요한 싸움이다.

또한 이는 전체 노동계급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처럼 잘 조직된 노조가 통상임금을 확대하고 기본급을 대폭 인상시킨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을 산정하거나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도 유리하다.

따라서 현대 · 기아차지부는 8월 20일과 22일 예정된 금속노조 시기 집중 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지배자들이 강요하는 '합법주의'에 발목이 잡혀서는 현장조합원들의 열망을 제대로 관철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대법원조차 행정지도를 이유로 파업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2008년에도, 2010년에도 부당한 행정지도를 거슬러 파업을 강행했다.**

14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자. 그리고 20일부터 시작될 파업을 힘 있게 건설해 나가자. 정부와 사측이 단호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도 단호하게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8월 1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행동에 동참하자

금속노조 조합원 김영오 동지가 '내 딸 유민이가 세월호에서 도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겠다'며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30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유민이의 억울함은 우리 모두의 억울함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경쟁을 위해 기업주들과 정부가 안전규제를 해체해 일어난 '살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정부 여권이 세월호 참사를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하며 보상 운운하는 것은, 작업장 안전 사고를 알량한 보상금으로 무마하고 산재처리를 피하려는 사장들의 행태와 똑같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특별법을 한사코 가로막는 것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이 사회의 실체가 파헤쳐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고위 정치인들의 부패한 유착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이제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 가자고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점에선 한목소리다. 노동계급 죽음에 대한 애도 따위로 시간 낭비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들이 해내야 할 몫이다. 독립적 진실규명기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 · 여당은 물론이고 국가-자본의 부패한 유착의 한 고리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에 앞장서며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이때,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만 범국민행동이 열린다. 전국에서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저항에 앞장서자.

통상임금 확대! 임금체계 개악 반대! 체불임금 지급! 기본급 인상!

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

최근 쌍용차와 한국지엠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신 기본급 인상이 억제되고 일부 수당이 깎여 적잖은 현장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합의안은 가결됐지만, 쌍용차 평택공장, 한국지엠 부평공장, 창원공장 등에선 조합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같은 합의는 올 초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시작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례적으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통상임금 확대, 임금체계 개편, 정년60세 도입, 노동시간 단축, 노동생산성 향상 등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라고 권고했다.

현대기아차 사측의 대응도 다르지 않다.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대응해 임금피크제 도입, 이중임금제 도입,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차등임금제는 약한 고리부터 야금야금 임금을 삭감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려는 악랄한 공격 중 하나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악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기본급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또, 사측이 "조기 8+8 도입"을 말하면서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 8+8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우리의 중요한 요구다. 그런데 정몽구는 해외 공장들에서 3교대제 도입(8+8+8)으로 밤샘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 지난 3년치 체불임금을 돌려받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요구다. 우려스럽게도 최근 현대 · 기아차지부 지도부는 이 문제를 소송으로 넘기려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법원은 한국지엠 소송 등에서 체불임금을 신의칙으로 가로막았다. 소송에만 기대서는 떼 먹힌 임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도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임단투에서 우리의 힘으로 과거 · 현재 · 미래의 임금을 지켜야 한다.

기아차 화성3공장 안전사고

작업 거부 정당하다. 탄압을 중단하라

7월 25일 기아차지부 화성3공장 하체2반에서 아찔한 안전사고가 발행했다. 10킬로그램이 넘는 머풀러가 작업자 머리 옆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에도 사측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안전사고가 아니다'며 관리자 1백여 명을 동원해 작업 강행을 지시했다. 이에 맞서 작업자들과 대의원은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요구하며 작업장에서 대피했다.

그리고 주간1조 작업이 끝나고 야간조가 출근할 때까지 완강히 버티며 싸웠다. 사측은 야간조가 출근하자 다시 라인 가동을 시도했고 담당 대의원은 연좌농성을 벌이며 맞섰다.

그런데 연좌농성을 벌이는 동안 사측이 설비를 가동해, 순간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사측의 막가파식 라인 가동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조립 1반 조합원 40여 명이 대열을 갖추고 '구사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해 함께 연좌농성을 벌였다. 통쾌하게도 이 기세에 눌려 사측 관리자들은 꽁무니를 뺐다.

이후 화성지회 집행부가 나서 사측을 비난하고 압박해 사측이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측은 '작업자의 잘못'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7월 29일 똑같은 공정에서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는데도, 사측은 작업 중단을 이끈 대의원을 고소고발하고 조합원들에게 특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열한 탄압을 자행했다.

사측의 이런 탄압은 기아차 화성3공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현대차 전주공장 엔진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사측의 이런 태도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한사코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의 모습과 똑같다.

안전 대책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한 대의원과 조합원들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사측은 형사고발 등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 조처를 취하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 앞두고 비정규직 조합원 이간질하는 사측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하라

8월 21일과 22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나자마자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해고자 동지들은 법원의 올바른 판결과 불법파견 중단을 촉구하며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이미 4년이나 질질 끌었던 법원은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반영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사측은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며, 한편으로는 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노조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법원이 일부 공정에 대해선 불법파견을 불인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수백 명에겐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측이 현재까지 내놓은 안은 고작해야 조합원 절반 정도만 대상으로 하는 턱없이 부족한 신규채용안이다. 심지어 사측은 노조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 아산 · 전주 비정규직지회가 조합원들 사이의 분열을 압박하는 사측과의 교섭에 매달리는 것은 안타깝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에 반대해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그리고 어렵지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가 나오면 이를 이용해 투쟁하려고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비정규직지회에 양보와 타협을 종용하지 말고, 실질적 지원과 연대를 해야 한다. 이번 파업에서도 법원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판결과 사측의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활동가들이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문의 :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정동석 (현대차 010-8363-5695)